

정책제언

강원도가 비상(飛翔)을 준비하고 있다.



남궁창성 |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국회가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새 출발을 한다. 특별법은 강원도가 가진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강원도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동시에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강원특별자치법 제정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 탄생과 민선 8기 강원도정 출범을 앞두고 300만 강원도민들의 염원을 담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강원도는 1953년 휴전 이후 접경지를 중심으로 강원도 내 여러 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내재적인 지역발전은 뒤로한 채 최우선적으로 국가안보의 최일선을 책임져야 했다. 영서내륙은 석탄 공급의 보급창으로서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하며 서민 가정에 값싼 연료를 공급하는 등 국가 경제발전에 앞장섰다.

북한강 수계 지역은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제대로 된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할 수 없었다. 영동지방은 수려한 산과 바다를 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했지만 정작 강원도민들은 국립공원보호구역이나 동해안 철조망에 공공 묶여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다.

강원도민들의 양보와 희생은 결과적으로 지역 낙후와 발전 지체로 귀결됐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 강원도는 정치와 경제 등의 분야에서 3% 미만의 최약체(最弱體) 광역 시도로 위상과 지위가 하락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호남권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초광역협력’을 통해 제 살길을 찾아 나섰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은 냉전시대와 근대화 과정에서 300만 강원도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담대한 양보와 희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법은 앞으로 추가 입법 등을 통해 특례 규정을 담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 강원도, 정치권은 법 시행에 앞서 앞으로 1년여 동안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체제의 특수성, 각종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

특히 국가와 여야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사실상 강원특별자치법은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강원도민들의 표를 의식해 속도전으로 입법을 추진했다. 그런 점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난 70년 동안 강원도와 강원도민들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특별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과 행정 관련 후속 조치를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운영 목표와 그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동시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천명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전제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지방정부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하며 각별한 배려를 주문했다.

아울러 국내·외적인 복합적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정부를 비롯해 정부와 대통령실의 ‘원팀’을 강조했다.

내년 7월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가 300만 강원도민들의 꿈과 비전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대한다.

출처:자치분권위원회 _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정부동향

보건복지부

향후 시·도 및 시·군·구에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지정·운영하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6월 22일부터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 주체가 변경되고, 시·도 단위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 이는 2025년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역사회 가까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 지자체장이 각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 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과 전북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부산 북구와 전북 순창군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선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절차 정비를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지정 등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제7조의4)
 -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 시·도지사는 지정 결과를 시·도의 누리집 등에 공고하는 등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다.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지정 등 절차 개정(안 제8조, 제10조)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신청하거나 중단·폐지·재개하려는 경우, 신청서(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였다.

 -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사업수행 평가 절차 등 정비(안 제11조)
 - 보건복지부 장관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정비하였다.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E-9) 2만 6천여 명 8월까지 들어온다!

-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
 - 또한,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 입국한 2만 8천여 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 연도별 입국 인원(명) : ('19년) 51,366 → ('20년) 6,688 → ('21년) 10,501
 - ** '22년 입국인원: (1~5월) 19,000명 → (6~8월) 26,000여명 → (9~12월) 28,000여명

-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국토교통부)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다.

- * 부정기편 증편: (네팔) 6.1.부터 주1회→ 주2회, (인니) 6.7. 주1회 추가, (미얀마) 7.6. 주1회 추가
- 고용노동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 (6월)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대면상담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심리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온라인상담서비스 ‘뉴(New) 잇는채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뉴(New) 잇는채팅’은 개인적 사정이나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대면상담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전문상담사가 정기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잇는채팅’은 2019년 도서산간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되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온라인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2022년 새롭게 진행되는 ‘뉴(New) 잇는채팅’은 청각장애 청소년, 범죄피해 청소년, 청소년부모 등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한다.
 - 상담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은 대면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환경적·신체적 요인으로 대면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뉴(New) 잇는채팅’은 온라인으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뉴(New) 잇는채팅’을 통한 상담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부모 등 보호자는 2022년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누리집(cyber1388.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책브리프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진일보를 기대하며

 박상희 | 육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새 정부 육아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 2022년 출범한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으로, 영유아기 교육·보육, 돌봄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방향을 공약¹⁾으로 제시한 바 있음
 - ▶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공동 공약으로는 교사의 처우개선, 단계적 유보통합, 영유아 친환경 급식 제공, 영유아발달전문가 파견이 포함됨. 보육 공약 관련해서는 영아반 교사 아동비율 축소가 제시되었고, 유아교육 공약은 교육분야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포함함.
 - ▶ 영유아와 초등1학년 부모가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중 성과가 높다고 응답한 정책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으로,²⁾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확충, 공공성 강화 등 관련 핵심 정책 이슈가 공약에서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임.
- 새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2022년 5월 3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³⁾를 발표함
 - ▶ 국정과제로 제시된 보육 정책은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민께 드리는 약속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정과제 46번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에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하여 아동당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 등이 포함됨.
 - ▶ 한편 유아교육 정책은 국정목표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국정과제 84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유보통합, 교육 사각지대 해소, 교원 업무부담 경감 등이 포함됨.

• [표 1] 새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비교

구분	공약	국정과제	
		관련부처	내용
유아 교육 · 보육 정책	1.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2. 영유아 친환경 급식 제공 3. 영유아 발달전문가 어린이집·유치원 파견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정목표3, 국민께 드리는 약속9, 국정과제 46) •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국정목표4, 국민께 드리는 약속15, 84)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보육 - 영아반 교사 아동비율 축소	보건복지부	(국정목표3, 국민께 드리는 약속9, 국정과제 46)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검토
	유아 교육 - 선생님 업무부담 경감, 아이들 학습권 보장	교육부	(국정목표4, 국민께 드리는 약속15, 국정과제 84) •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 재배분 •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의 행정업무 총량 감축 -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 확대

자료: 1) 국민의 힘(2021).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발췌하여 정리
2)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2022.5).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pp. 87-89.. p.113. p.142.

- 본 글에서는 윤 당선인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아교육·보육 정책 관련한 내용 중에서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과 새 정부에서 핵심 정책으로 다루어야만 하는 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함.

2.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주요 이슈

- 어린이집·유치원의 단계적 유보통합을 위한 선결과제
 - ▶ 새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의 단계적 통합을 제시하고, 이를 국정과제(46, 84)에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포함함.

- ▶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정과제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국정과제 46(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의 하위 과제로, 국정과제 84(교육부)에는 유보통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있음.
- ▶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 차원에서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 기준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간제 보육 개선 등 하위로 단계적 유보통합 방안 마련이 제시되어 있고,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하위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초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이 제시되어 관점의 차이를 보임.
- ▶ 교사 자격 및 처우, 시설 기준, 재정, 거버넌스 등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면, 유보통합은 중장기 계획 하에 추진될 수밖에 없지만 교사 자격, 재정 등 유보통합의 민감하고 쉽게 풀기 어려운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통합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표 2] 어린이집·유치원의 단계적 유보통합 관련 국정과제

	국정과제 46(보건복지부)		국정과제 84(교육부)
보육 서비스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 부모교육·시간제 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유보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자료: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2022.5).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p. 87. p. 142.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수준

- ▶ 새 정부는 공약에서 민간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들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국정과제(46, 84)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으로 포함됨.
- ▶ 민간 의존도가 높은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교사의 처우는 유치원(국공립/사립), 어린이집(국공립/직장/민간 등) 내의 격차도 심각한 상황임. 2021년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본급 실태조사 결과, 경력반영이 되지 않은 월 급여는 179만원이었고⁴⁾, 가장 최근 조사된 사립유치원 교사의 월평균 급여(2019년 3~9월 세전 급여 기준)는 200만원으로⁵⁾ 나타남.
- ▶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급여에 관한 동일 시점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절대 비교가 어려운 상황으로 기관(시설) 간의 격차 외에 처우개선 수당의 지역별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준이 설정되어야 함

• 지역별 격차를 고려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 ▶ 새 정부는 영아반 교사의 아동비율 축소 공약의 세부 내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3세, 만 4~5세까지 단계적 하향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정과제 46(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 검토)에 포함됨.
- ▶ 만 3~5세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어린이집이 각각 15명, 20명, 20명이고, 2021년 기준,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시도별/공사립 유형별 차이가 큰 상황(예: 서울은 공립 16명, 22명, 26명, 사립 16~20명, 22~25명, 26~30명, 충북은 공사립 공통으로 15명, 20명, 23명)임.⁶⁾
- ▶ 유아교육·보육의 구조적 질 개선의 주요 요인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은 향후 영유아 수 추이, 재정여건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중장기 과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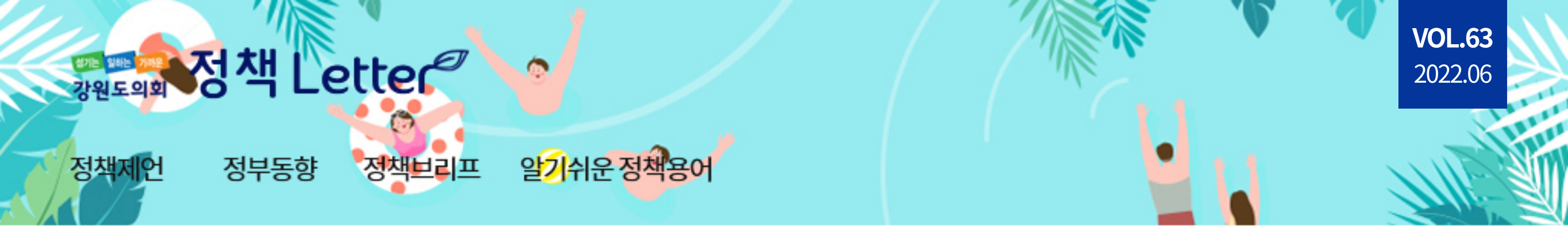
3.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과제v

• 영유아의 전생애적 발달을 고려한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지속성 담보

- ▶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는 급속하게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변화보다는 인간의 전생애적 발달의 연속성 측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책이 형성되기 보다는 숙성된 담론 형성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 요구됨.
- ▶ 최근 발표된 보육실태조사 결과, 영유아 가구가 희망하는 보육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22.0%로 2018년 (35.9%)에 이어 1위를 차지함(뉴시스, 2022.4.28)⁷⁾. 이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되었던 국공립 확충, 공공성 강화 등은 민간 의존도가 높은 유아교육·보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여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횡적·종적 연결성 확보를 위한 유보통합의 완성

- ▶ 유아교육·보육의 완전한 통합은 3세 미만과 3세 이상 영유아부터 학령기까지의 아동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경계가 없는 서비스이며, 상호 협력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정립해주는 파트너십임을 고려해야 함⁸⁾.
- ▶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5월, 유보통합의 임기 내 완성을 목표로, 단계적인 유보통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⁹⁾, 유보통합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고, 추진된 노력의 결과들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과거의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교사의 처우개선 수준 설정을 위한 동일시점의 실태조사 필요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급여에 관한 동일 시점의 실증 데이터를 구축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의 처우개선은 자격과 경력 등과 연동하여 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함.

• 기관(시설) 간, 지역별 격차를 고려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설정

▶ 2021년 서울시는 보육교사 1명 당 아동 수를 '만0세 반'은 3명→2명, '만3세 반'은 15명→10명으로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범위와 방향, 규모를 결정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10) 유치원도 학급당 유아 수 조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

▶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법적 공통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에 대한 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위임(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6조)'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별 기준이 상이하하며, 격차도 큰 상황으로 학급당 유아 수 기준에 대한 최저/최대 기준을 권고할 필요가 있음.

각주

- 1) 국민의 힘(2021).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 2) 문무경, 양미선, 송기창, 김문정(2021). 2022-2027 유아교육·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3)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2022.5).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4) 경향신문(2021. 1. 7). 10년차 어린이집 교사 월급, 국공립 235만원·민간 179만원
- 5) 연합뉴스(2020. 10. 15). "사립유치원 교사 10명 중 1명, 임신·출산으로 퇴직 요구받아".
- 6) 교육희망(2021. 6. 22). 시도마다 들쭉날쭉 학급당 유아수 배치기준, 만5세 23명~30명
- 7) 뉴시스(2022.4.28.). 부모가 바라는 육아정책 1위는 '국공립어린이집 늘려달라'.
- 8) 최은영(2015). 한국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선결 과제. 육아정책연구, 9(1), 257-277
- 9) 국무조정실(2013. 12. 3). 「유보통합, 학부모 의견 최대한 반영해 임기내 완성. 보도자료.
- 10) 내 손안에 서울 뉴스(2021. 4. 20).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 줄인다...만3세반 15명→10명.

출처: 육아정책연구소_ 박상희 연구위원

알기쉬운 정책용어

딱 풀 이 딱 딱 한 정 책 용 어 풀 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메가시티’ 도약을 위한 국내 첫 특별지자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수도권 과밀-지방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지자체 경계를 넘어 거대 경제·생활권을 만드는
초광역협력 전략을 추진해왔어요.

부울경 특별연합이 그 첫 번째 성과입니다!

특별지자체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목적 위해 설치)

- ✔ 별도 단체장 및 지방의회 구성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 등 자치권 보유
- ✔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수행
부울경 특별연합: 광역 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

알기쉬운 정책용어

부울경,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기대

베이징·도쿄·홍콩 등과 같은
세계적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차·항공·수소 등 신산업 육성,
1시간대 광역교통망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육성 등을 추진합니다~!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부울경 특별연합이
균형발전 선도모델로 성공하도록,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공동체 만들겠습니다!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추진 중